

‘전국 최고’ 광주 출산장려금, 인구 140만명대 붕괴 막나

출산축하금+육아수당 규모 전국 특·광역시 중 ‘1위’

지난 연말 인구 145만명...6년째 하강곡선 제동 관심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가 심각한 가운데 광주시의 출산축하금과 육아수당 등 출산장려금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째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 광주 인구가 시의 적극적인 출산 유인 정책으로 140만명대 붕괴를 막고 다시 늘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출산축하금으로 100만원, 육아수당으로 매월 20만원씩 24회(0~24개월) 지급한다.

올해 출산한 아이는 축하금 100만원과 2년간 육아수당 480만원을 합쳐 모두 58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5개 광주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어 그 액수는 더 늘어난다.

현재 광주는 시가 지원하는 축하금 이외에 구비를 들여 동구는 둘째아 이상 20만원, 서구는 셋째아 이상 20만원이 지급된다.

또 남구는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20만원, 넷째아 50만원, 다섯째 이상 100만원, 북구는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광산구는 셋째아 45만원, 넷째아 100만원 이상,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의 출산축하금이 지급된다.

올해 광산구에서 다섯째아 이상을 낳을 경우 2년간 총 88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특히 육아수당의 경우 '0~24개월' 구간의 모든 유아에게 수당이 지급된다. 2019년에 태어나 24개월이 안된 유아도 수당이 지급되는데 이날 현재 1만5000여명이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출산 장려 인센티브는 전국 특·광역시 중 최고, 16개 시·도 가운데 강원도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출산축하금으로는 제주시가 200만원, 세종시가 120만원, 인천시가 100만원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 많지만, 육아수당이 없다. 광주시는 출산축하금에 육아수당을 포함하면 최고로 많다.

다만, 강원도는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육아기본수당을 40만원씩 4년간 지급된다. 총 1920만원 규모다.

광주시가 지난 연말 시의회의 반대 속에서도 출산축하금과 육아수당을 대폭 상향함에 따라 줄어드는 인구를 다시 늘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말 주민등록 기준 총인구는 145만19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3만

명 가까이 줄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49만2900여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15년 149만600여 명, 2016년 148만9100여 명, 2017년 148만5000여 명, 2018년 148만2000여 명, 2019년 148만200

여 명 등 6년째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140만명대대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지역의 미래와도 연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물이 100도가 돼야 끓듯이 월 10만원의 육아수당으로는 출산 유인 효과를 내기 어려워 과감한 지원에 나서게 됐다. 소기의 성과를 기대해 본다”고 밝힌바 있다.

기동취재본부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열린 동장군

전국에 강력한 한파가 덮친 6일 오전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바닷물이 얼어 있다. 부산기상청은 이날 부산의 아침최저기온은 영하 5.9도, 체감온도 영하 14.5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범기 닮은’ 영광군 심벌마크 19년 만에 교체

‘CI·캐릭터’ 새 디자인 확정...상반기 교체작업 진행



영광군이 일제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육일기) 문양을 닮아 논란이 일었던 심벌마크(CI)를 19년 만에 교체했다.

영광군은 지난해 6월부터 6개월 간 새로운 CI·캐릭터 개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주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새로운 CI와

캐릭터 디자인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때 일제 전범기 논란이 일었던 기존 CI는 2002년 개발 이후 19년 간 사용해 왔다. CI는 전체 2359명 중 822명(34.9%)이 선호했고, 캐릭터는 2576명 중 975명(37.95%)으로부터 표를 받아 선정됐다.

영광군은 상반기내로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심벌마크와 군기, 캐릭터를 공식변경할 예정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학교로 지정해야”

전남교사노조 “학부모 보복 우려돼 교사들 큰 부담”

전남교사노조총합(위원장 이영미)은 6일 입양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 “정부 관계부처와 각 시도교육청은 유례없이 강력한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전남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 신고체계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지 못한 사회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교사노조는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다.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며 학생이 겪는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 그러나 교사 대부분은 현장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남교사노조는 “교사들은 학생 보호와 안전을 위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수사 과정이나 결과로 학생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될까 봐 걱정한다. 신고 대상이 학부모라면 교권침해와 보복성 대응이 우려돼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전남교사노조는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을 촘촘하게 점검해야 한다.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가 우선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신고 의무자를 교사 개인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학교로 지정하고, 최초 제보자를 우선 보호하는데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본부

전남도, 내달 말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전준비 착수

전남도는 5600만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오는 2월 말 공급하겠다는 정부 대책에 맞춰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남도는 2월 말 백신 접종시기에 맞춰 백신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보건, 콜드체인 운송, 접종방법,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종합한 세부 접종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 접종기관 지정·운영과 접종인력 확보, 접종 교육·훈련, 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등을 위해 의료 전문가를 포함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단을 전남도와 시·군이 각각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김정환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